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4.22.(목)

책 임 자		담 당 자	
	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 전 요 섭(02-2100-1720)		고 선 영 사무관 (02-2100-1741)
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(02-2100-2530)		최 민 혁 사무관 (02-2100-2534)

제 목 :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□ 국회에서 심의·의결한 **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**('21.3.25일)에 따라 **가상자산사업자**는 **일정 신고 요건**을 갖추어 **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신고**해야 합니다.

○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**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,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** 등의 **요건**을 갖추어야 하며,

○ **신고접수기한인 9.24일**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.

○ **요건을 갖추지 못한**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**폐업 가능성**이 있으므로,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**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**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
※ 신고 현황 : 금융정보분석원(FIU) 홈페이지(www.kofiu.go.kr)에서 확인

□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**별도의 신고·등록 없이 영업**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·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,

○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**가상자산사업자**는 종전의 **취급업소**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**보관관리업자**, 가상자산 **지갑서비스업자**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.

*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~200여개로 추산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참고 가상자산 관련 범부처 대응 보도자료('21.4.19)

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1. 4. 19(월) 배포
담 당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담당자	과장 권민영, 사무관 곽재완 (044-200-2190, 2192)
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	과장 박주영, 사무관 최민혁 (02-2100-2530, 2534)
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		실장 전요섭, 사무관 고선영 (02-2100-1720, 1741)
	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		과장 심현우, 사무관 홍석찬 (044-215-4810, 4753)
	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		과장 최미정, 사무관 김남승 (044-202-6460, 6461)
	법무부 상사법무과		과장 임철현, 서기관 이규철 (02-2110-3167, 3256)
	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		과장 황윤환, 사무관 설민아 (044-200-4450, 4459)
	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		팀장 김영주, 사무관 신동령 (02-2110-1560, 1566)
	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		과장 배상호, 사무관 서인숙 (02-2100-3121, 3125)
	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		과장 최종상, 경감 서승모 (02-3150-1605, 1959)

4~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

-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 분석, 유사수신·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으로 국민 피해 방지 -

□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**자금세탁,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**이 높아짐에 따라 **4~6월**을 **'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'**으로 정하고,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**집중 단속**키로 했습니다.

① (금융위) **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** 발생시, **금융회사**가 보다 **면밀히 1차 모니터링** 하도록 하고,

-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**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, 수사기관,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·수사 공조체계를 강화**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② (기재부) **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** 등 **관계법령 위반여부**에 대한 **점검을 강화**해 나가겠습니다.

③ (경찰) **불법 다단계, 투자사기** 등 **불법행위**를 **집중단속**할 계획입니다.

- **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*** 및 **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** 등 수사의 **전문성 강화**를 통해 **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**해나가겠습니다.

* (반부패·경제범죄수사대)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, (사이버범죄수사대)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 (사이버테러수사대) 가상자산사업자 공격,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

④ (공정위) **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**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**불공정약관**에 대해서 **시정**할 계획입니다.

⑤ (**방통위**)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**투자사기, 유사수신,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** 등 온라인상의 **불법정보의 유통**을 방심위를 통해 **차단**하겠습니다.

⑥ (**개인정보위**) 가상자산사업자의 **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**하고, **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**시 **즉각적인 조사 실시**해 추가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.

□ 아울러, 정부는 9.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, **내년 1월**부터 시행될 **가상자산 소득 과세**를 위한 **인프라 구축**을 **차질없이 추진**할 것입니다.

○ 국민들이 **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**을 알 수 있도록, 금융정보분석원(FIU) 홈페이지에 **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**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□ 이는 4.16일(금) **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**로 개최한 가상자산 **관계부처 차관회의**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.

* (참석) 기재부·과기정통부·법무부·방통위·공정위·금융위·개인정보위·경찰청 차관·실장급 등

○ 동 회의는 지난 4.7(수)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**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**하고, **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**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
□ 동 회의에서 **구윤철 국무조정실장**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,

○ **“가상자산의 가치**는 **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,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.**

○ 아울러, “실제 **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, 유사수신, 사기 등 불법행위**도 **발생**하고 있는만큼, 이에 대해서도 **각별히 유의”**해 줄 것을 **당부**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**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**을 **예의주시**하면서 **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**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